



2014년 정부예산안 평가: 보육 및 일가정 양립 부문

2013.10.11 | 최정은_ 새사연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2014년 새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실망스럽게도 무상보육, 유아 무상교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과 후 돌봄, 임신-출산-육아 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상당부분 후퇴되거나 파기되었다.

1. 들어가기

뱃속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행복’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예산안 발표로 각계로부터 ‘사기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크게 후퇴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크다.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박근혜 정부의 공약들은 대거 후퇴될 조짐을 보였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안만 해도 그렇다. 새 정부의 공약과 다르게 소득 하위 70% 이하로 혜택 대상을 줄였다. 게다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오히려 국민연금 11년 이상 가입자의 기초연금 혜택이 줄어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기초연금을 물가와 연동해 향후 20년 안에 지급액이 반 토막이 될 문제마저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한 1호 법안이 무상보육임에도 올 하반기 들어 중단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에 재정 책임을 전가하면서 안정적인 지원은 약속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 개정안을 무시하고 서울시에 던지시 제안한 무상보육 정부 부담 10%p 인상안만 새 예산안에 반영해 무상보육마저 가로막고 있다.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방과 후 돌봄,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보육 및 가족지원 공약들이 2014년 예산안에서 대거 후퇴되거나 아예 빠지면 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책임 보육, 국민 행복’ 의 기조마저 뒤흔들고 있다. 이와 관 련한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새 예산안을 대비해 평가해보겠다.

표1.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2014년 정부예산안 추진경과 비교

구분	박근혜 정부 공약		2014년 정부예산안 추진경과
	공약명	세부내용	
무상보육	만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정부부담 20%p 인상	보육료와 양육수당 4조1974억원(7219억원 증액)
	만5세까지 국가 무상유아교육		누리과정 4조1500억원(7316억원 증액)
양질의 보육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50개 신축과 기존 100개 전환	국공립 25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등 215억원(78억원 증액)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300개소 확대 385억원(85억원 증액)
		직장어린이집 확대	30개소 확대 762억원(264억원 증액)
		보육교사 급여인상	없다
일가정 양립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준비
		‘아빠의 달’ 도입	법안 준비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셋째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1225억원(신설)
		맞춤형 보육 시스템	없다
		임신과 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확대	취약지역 산부인과 1개소, 외래 산부인과 8개소, 순회진료 10개소 등 52억원(12억원 증액)
방과후돌봄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저소득층 영아 분유, 기저귀 지원	없다
		난임 부부 지원비 확대	없다
		12세 이하 필수 예방 접종비 무상지원	본인부담 무료 전환 1053억원(178억원 증액)
		고위험 임신부 별도 지원	통합지원센터 2개소
		2014년 맞벌이 가정 등 초등1, 2학년 오후5시까지 ‘온종일 돌봄 학교’, 오후 10시까지 연장 돌봄 교실 무상지원	없다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새로 일하기 센터 30개소씩 확대)	특화형 새일 센터 10개소 설치와 교육과정 등 45억원((45억원 증액)

자료: 새누리당, 2012; 기획재정부, 2013; 보건복지부, 2103; 여성가족부, 2013; 교육부, 2013; 고용노동부, 2013.9.26.



2. 새 예산안 쟁점별 평가

1) 무상보육 ‘흔들’

만0~5세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내년도를 기약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올해부터 영유아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전 계층 지원으로 확산되어, 그야말로 무상보육이 정치적 구호에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2014년도 정부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무상보육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없다. 2012년 무상보육 파행을 한차례 겪은 뒤, 국회에서 합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안에는 무상보육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서울시 20→40%, 지자체 50→70%로 20%p 인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으로 정부의 재정 뭍은 10%p 인상액만 그쳐 있다.

표2. 무상보육 추진경과

박근혜 정부		2014년 정부예산안 추진경과
공약명	세부내용	
만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정부부담 20%p 인상	보육료와 양육수당 4조1974억원 (7219억원 증액)
만5세까지 국가 무상유아교육		누리과정 4조1500억원 (7316억원 증액)

현행대로라면 무상보육 재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절반씩 부담하고 있었다. 2013년도 국회에서 의결된 최종예산을 보면, 국비는 3조4792억원으로 전체의 49%, 지방비는 3조6157억원으로 51%를 부담한다.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명목으로 4조1974억원이 배정되었다. 이는 정부부담을 10%p 인소한 예산으로, 국비부담이 50%에서 60%로 늘어나고, 지방비는 50%에서 40%로 줄어든 셈이다. 이 계산법으로 대략 보면 지방비는 2조7983억원으로, 국비와 합친 전체 무상보육 예산을 7조 가량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내년도 보육예산안에는 만4~5세 누리과정 교육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라, 본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표3. 무상보육,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 비교(단위:억원)

구분	2013년 정부예산안	2013년 국회의결	2014년 정부예산안
국비	24,939(53.3%)	34,792(49.0%)	41,974(60.0%)
지방비	21,818(46.7%)	36,157(51.0%)	27,983(40.0%)
전체	46,757	70,949	69,957

자료: 누리과정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출되는 내역은 제외.



이 같은 예산안대로라면 또 한 차례의 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까지 정부예산안은 필요 예산에 크게 미달해왔고 무상보육은 매년 중단 위기를 맞았다. 2012년도에는 예산안 국회 최종 의결 단계에서 만0~2세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안을 끼워 넣어 전국적으로 예산 부족을 초래했다. 올해는 만0~5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전 계층 지원으로 전면화했으나 지자체 재정 여건은 이에 걸맞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자체 재정이 고사상태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국고지원이 결정되는 갈등 과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보육 재정 부담을 지면서 매해 정부와 가장 큰 갈등을 겪어왔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세수 부족과, 급격히 늘어난 복지 부담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정되지 않고서는 무상보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서울시는 올해 9월 무상보육 중단을 앞두고 200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국가 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정부부담은 20%p 올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12년 정부예산안에는 서울시 부담 3872억원(71%), 정부 부담 1602억원(29%)이었으나, 2012년 국회의결 최종안과 이후 무상보육 파행 이후 서울시 부담 4466억원(56.4%), 정부 부담 2294억원(14.6%)과 추가지원 1157억원(29%)을 합해 43.6%로 조정되었다. 올해는 2013년 정부예산안은 서울시 부담 5828억원(71%), 정부 부담 2381억원(29%)이었으나, 2013년 국회의결 최종안과 이후 파고를 거치면서 서울시 부담 4160억원(39.0%)과 서울시 빚 2000억원(18.8%)으로 전체의 57.8%, 정부 부담 3073억원(28.8%)과 추가지원 1423억원(13.4%)으로 전체의 42.4%로 조정되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다. 현재 내년도 예산은 2014년 예산안에 정부 부담을 현행에서 10%p 증액해 서울시 부담 7132억원(61.2%), 정부 부담 4522억원(38.8%)으로 배분되어 있다.

이제까지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의 조정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부 부담은 2012년 43.6%, 2013년 42.2%였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부담이 38.8%로 오히려 가장 낮아진다. 만약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부담이 기존에서 20%p 인상된다면 서울시 부담은 5967억원(51.2%), 정부 부담은 5687억원(48.8%)으로 갈등과 조정과정 없이 무상보육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표4. 무상보육, 정부와 서울시 재정부담 비교(단위: 억원)

구분		2012년 정부예산안	2012년 국회의결 조정	2013년 정부예산안	2013년 국회의결 조정	2014년 정부예산안	국회 법사위 상정안
서울 시	부담	3,872(71%)	4,466(56.4%)	5,828(71%)	4,160(39.0%)	7,132(61.2%)	5,967(51.2%)
	지방채 발행				2,000(18.8%)		
정부	부담	1,602(29%)	2,294(14.6%)	2,381(29%)	3,073(28.8%)	4,522(38.8%)	5,687(48.8%)
	추가 지원		1,157(29%)		1,423(13.4%)		
전체		5,474	7,917	8,209	10,656	11,654	1,1654
보육 정책 변화	만0~2세	소득하위70%	전계층 지원	전계층지원	전계층지원		
	만3~4세	소득하위70%	소득하위70%	전계층지원 (누리과정)	전계층지원 (누리과정)		
	만5세	전계층지원 (누리과정)	전계층지원 (누리과정)	전계층지원 (누리과정)	전계층지원 (누리과정)		
	양육수당	시설미이용 소득하위15%	시설미이용 소득하위15%	시설 미이용 소득하위70%	시설 미이용 전계층		
보육 갈등			7월 서초구 무상보 육 중단 위기를 시 작으로, 전국 지자 체 무상보육 국고 지원 요청		9월 서울시 무상 보육 중단 위기 에, 결국 서울시 지방채 발행하고 국고지원 받음 서울시와 새누리 당 책임론 공방 지속	2012년 영유 아보육법 개정 안 대신 정부 예산안 정부부 담 10%p만 인상(서울시 30%, 타 지자 체 60%)	

자료: 서울시, 2013.5; 서울시, 2013.10 참고 재구성.

유아 무상교육 누리과정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만4세아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넘어가면서 교육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조 원가량 증가할 계획이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은 2,300억 원만 증액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장기계획대로 증액되지 않으면서 유아무상교육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게다가 증가하는 원아수를 감안한 실질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서,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진후 의원실, 2013.10).

표5. 누리과정 예산안 비교(단위:억원)

구분		2013년(A)	2014년(B)	차액(B-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0,619	412,931	2,312
누리과정	국고	3,827	2,228	△1,599
	지방비	3,920	2,282	△1,6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437	36,990	10,553
소계		34,184	41,500	7,316

자료: 정진후 의원실 보도자료, 2013.10.



이처럼 무상보육을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보기 무색할 정도로 2014년 예산안은 크게 후퇴되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물론 누리과정 재정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채 내년도 예산안이 집행되어, 내년에도 무상보육 파행이 불가피하다.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후퇴'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현실적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할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대라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매해 150개씩 늘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은 그 절반인 75개 확대에 불과했고, 내년에는 원래 계획에 턱없이 모자란 25개만이 늘어난다. 매해 국공립 신축은 50여개, 기존 어린이집 전환은 100여개였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축과 전환이 25개, 리모델링 19개, 합해서 전체 44개로 확 줄었다.

표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경과

박근혜 정부 공약		2014년 예산편성 추진경과
공약명	세부내용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50개 신축과 기존 100개 전환	국공립 25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19개소 등 215억원 (78억원 증액)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300개소 확대 385억원 (85억원 증액)
	직장어린이집 확대	30개소 확대 762억원 (264억원 증액)
	보육교사 급여인상	없다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부족하다. 어린이집 수요는 있으나 취약지역 등의 이유로 읍면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전국 453개나 된다. 이러한 곳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내에 매년 100개소를 늘리더라도 전국 미설치 지역 수만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보건복지부, “2012년 보육통계, 2012.12). 시장에 내맡겨진 보육 사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고도 믿고 맡길만한 곳을 찾지 못하는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수는 급격히 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보육교사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급여 인상 등을 새 정부가 약속했다. 새 예산안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내년에 300여개를 늘리기 위해 85억원을 증액했고, 직장어린이집은 30여개소를 확대하면서 264억원을 증액했다. 공식적으로 보육교사 급여 인상을 위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단지 공공형 어린이집 300



여가와 직장어린이집 30여개를 통해 보육교사의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로는 부족하다. 전국 3만7천여 개에 달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일가정 양립 ‘무색’

임신, 출산, 육아를 뒷받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새 예산안에서 상당수 빠져있다. 이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공약 중에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1225억원이 신설되었고, 취약지역 임신과 분만을 위한 의료지원을 위해 12억원 증액, 12세 이하 필수 예방 접종비 5천원 본인부담을 무료로 전환하기 위해 178억원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나 아빠의 달 도입은 법안 준비 단계이며,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대나 저소득층 영아의 분유나 기저귀 지원, 난임 부부 지원비는 새 예산안에서 고스란히 빠졌다.

표7.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추진경과

박근혜 정부 공약		2014년 예산편성 추진경과
공약명	세부내용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준비
	‘아빠의 달’ 도입	법안 준비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셋째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1225억원(신설)
	맞춤형 보육 시스템 (돌봄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서비스 확충)	없다
임신과 출산 국가 부담 확대	임신과 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확대	취약지역 산부인과 1개소, 외래 산부인과 8개소, 순회 진료 10개소 등 52억원 (12억원 증액)
	저소득층 영아 분유, 기저귀 지원	없다
	난임부부 지원비 확대	없다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본인부담 무료 1053억원 (178억원 증액)
	고위험 임신부 별도 지원	통합지원센터 2개소

4) 방과 후 돌봄 ‘파기’

지난 대선에서 환영받았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방과 후 돌봄 확대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라지고, 기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던 사업 외 맞벌이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종일 돌봄 사업들은 시범사업에 불과한



예산안만 배정되었다. 이 비용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기댈 전망이다,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다.

표8. 방과 후 돌봄 추진경과

박근혜 정부 공약		2014년 예산편성 추진경과
공약명	세부내용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	2014년 맞벌이 가정 등 초등1, 2학년 오후5시까지 '온종일 돌봄 학교', 오후 10시까지 연장	없다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없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방과 후 운영비로 577억원이 증액된 3183억원에 불과하다. 약속한 공약은 사라지고, 초등 돌봄 교실 지원은 1270억원으로 13개실 지원에 불과하고, 오후 돌봄은 전국 초등학교 중 18개교 지원이 전부다. 온종일 돌봄은 16개교, 토요프로그램 운영은 23개교 지원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 사업은 내년에는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5시 운영과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예산편성 추진경과에서 해당 내용은 누락되었다. 게다가 약속했던 돌봄 교실의 무료지원과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역시 고스란히 빠졌다.

초등 저학년 대상의 방과 후 돌봄 사업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나 여성의 경력단절과도 큰 관련성이 있다. 영·유아기에는 종일 돌봄 시설이 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른 하교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맞벌이 가정이 방과 후 돌봄 확대를 기대했으나, 이 정책 역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5) 양질의 여성 일자리 '포기'

박근혜 정부의 '고용율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여성의 고용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 고용의 큰 난관인 여성의 경력단절을 풀어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예산은 35억원이 늘어난 391억원이 배정되었다. 특화형 새 일 센터 10개소를 설치하고, 기업맞춤형 과정 82개 교육과정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으로는 새로 일하기 센터는 매년 30개소씩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은 10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새 일 센터의 기능을 교육



과 이를 통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넓혀야한다. 그러나 현재 여성 일자리 교육과 직접 취업 간의 미스매칭 현상이 여전한데다, 여성의 일자리를 시간제 비정규직으로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기대할 수 없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9.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추진경과

박근혜 정부 공약		2014년 예산편성 추진경과
공약명	세부내용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새로일하기센터 30개소씩 확대	특화형 새일 센터 10개소 설치와 교육과정 등 45억원((45억원 증액)

3. 종합적 평가

2014년 예산안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질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는 어떻게 차별화될지 가늠하게 하는 평가 잣대가 된다. 실망스럽게도 이번 예산안은 경제 전망에서 복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전 정부와 별다르지 않음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동시에 정치색을 떠나 새 정부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마저 꺾고 있다.

무상보육, 유아 무상교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과 후 돌봄,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가족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상당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새 예산안대로라면 무상보육은 내년에 또 한 차례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유아 무상교육마저 지자체의 교육 재정 부담으로 떠넘겨져 불투명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민간어린이집 지원이나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증액된 예산의 1/5수준으로 협소하다. 맞벌이를 위한 방과 후 돌봄 예산은 고스란히 빠져 지자체 교육 재정 여건에 기댈 수밖에 없다. 또한 저소득층 영아 분유와 기저귀 지원, 고임산부 지원은 아예 없다. 게다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고용율을 높이는 핵심 정책임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찾아볼 수 없다.

새 예산안에 비춰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대거 후퇴되거나 파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새 정부가 얼마나 공약을 지켜갈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앞으로 정기 국회에서 새 예산안을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이 예고된다. 박근혜 정부는 남은 연말까지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국민과의 약속마저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내년도 일자리 예산” , 2013.9.26.

교육부,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3.9.26.

기획재정부, “2014년 예산안” , 2013.9.26.

보건복지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 2013.9.26.

여성가족부, “201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 2013.9.26.

서울시, “정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조정 방안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참고자료” , 2013.10.

서울시, “2013년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설명자료” , 2013.5.

새누리당, “박근혜 공약집” , 2012.

정진후 의원실 보도자료, “3~4세 누리과정에서도 무상보육 ‘빨간불’ ” , 2013.10.



2013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10월 11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최정은
이슈진단	4/3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김병권
이슈진단	4/11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병권
이슈진단	4/24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5/2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여경훈
이슈진단	5/9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6/7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이은경
이슈진단	6/12	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김병권
이슈진단	6/17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여경훈
이슈진단	6/27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김수현
이슈진단	8/13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여경훈
이슈진단	10/8	인구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전망	여경훈
이슈진단	10/11	2014년 정부예산안: 보육 및 일가정 양립 평가	최정은